

격 려 사

올해로 10.27 법난이 발생한지 31주년이 되었습니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사회정화계획을 빌미로 불교계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충격을 준 사건이자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체제를 파괴한 사건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10.27 법난에 대하여 불교계는 그동안 법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종단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8년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식 사과 담화문을 비롯하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 법난 사건조사 결과발표’, 2008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등 종단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10.27 법난은 신군부의 계획된 법난으로 특정한 종교단체에게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는 정부의 최종 결론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계신 일부 피해자 스님들에 대한 보상 이외에는 종단이나 불자들이 수궁할 만한 합당한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난의 고통으로 이미 입적하신 피해자 스님들과 출가 수행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당시 왜곡된 언론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스님들에 대하여 보상 절차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사찰과 종단의 심각한 명예 실추와 법난으로 인한 신도 감소 등의 실질적 피해도 단지 계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안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단은 이제 10.27 법난의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10.27 법난의 교훈을 역사에 새기고 국가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나아가는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는 단순한 망각이나 용서만이 답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사과도 피해사실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10.27 법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지금이라도 종단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과 적극적인 피해 보상 의지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개최하는 세미나의 주제가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위한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이자 국민분열 사례인 10.27 법난이, 늦었지만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가능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 준비와 발제, 토론 등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0.27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스님과 위원님들, 지원단의 최동식 단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종단도 10.27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기2555년 1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